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목 차>

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예외사유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고선영
	담당부서 (과)	기획행정실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전요섭		연락처	02-2100-1741
	과장	오화세		이 메 일	2080754@mail.go.kr

2021. 02. 10.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예외사유		
	2.규제조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제27조제1항		
	3.위임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단서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2.18 ~ 2021.03.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제17113호)됨에 따라,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7.규제내용	○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지 않아도 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113호)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9.규제목표	○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자산거래 서비스 중에 금전과 가상자산 간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금전의 수수료가 없어 입출금 계정이 불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예외 사유로 규정하였으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기타	12.일 몰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27조(신고)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시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는 우려 하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발표('19.6월)
 - ☐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20.3.24일 공포, '21.3.25일 시행)하였으며,
 - 이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 ☐ 개정법에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예외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 도입이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경우 입출금 계좌가 필요 없으므로 이를 예외 사항으로 규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3. 규제목표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가상 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경우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예외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규제 정합성을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신고 불수리 사유 중 하나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예외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과 수단간 비례가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때 신고 불수리 사유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적 개념정의가 적합하지 않아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때 신고 불수리 사유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연한 분류체계가 적합하지 않아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때 신고 불수리 사유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아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때 신고 불수리 사유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아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때 신고 불수리 사유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아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할 때 신고 불수리 사유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규제 준수가 가능할 것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행정적 집행가능성에는 이상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검사·감독과 관련된 업무는 금융정보분석원 인력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별도의 재정적 집행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0.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에 따라 신고 불수리 요건의 예외를 규정

2. 향후 평가계획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이후 검사 등으로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추가 마련

3. 종합결론

-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신고 불수리 사유의 예외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이행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의적절한 개선이라 할 수 있음